

민주노총 경기본부 “중대재해 가해자 보호하는 정부 반성하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서 규탄 기자회견 개최
“경영계 요구만 수용 중대재해법 실현 안돼”
중대재해 229건 중 검찰 기소 11건에 불과

경기지역 노동자들이 경영계의 요구만 수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26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는 경영계 요구를 대폭 수용해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 효과를 발휘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노사추천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한다 했으나 한 달 만에 전문가로만 구성된 전담팀을 발족했다”며 “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현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

229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으나 52건만 처리됐다. 이 중 검찰의 기소는 11건에 불과하고 대기업에 대한 사건은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한규협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석본부장은 “정부가 기업 처벌을 완화하고 중대재해 피해를 당하는 노동자 처벌과 징계를 강화하려 한다”며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으나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화일약품 화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김모 씨(29)의 유가족도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는 정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 A씨는 “화일약품 화재사고로 사망한 아들은 대피하라는 말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사고 피해자는 잠도 못 자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데 가해자인 화일약품 대표의 잘못을 회피하고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아들을 죽게 만든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표를 보호하는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화일약품 화재사고 유가족은 “화일약품 중대재해 기소 촉구 서명지”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전달했다.



26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박진석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은 경기, 서울, 전북 등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박진석 기자

‘인재’로 밝혀진 안성 물류창고 추락 사고

동바리 임의로 2단 연결해 하중 못버터
콘크리트 한쪽에 몰아 타설한 영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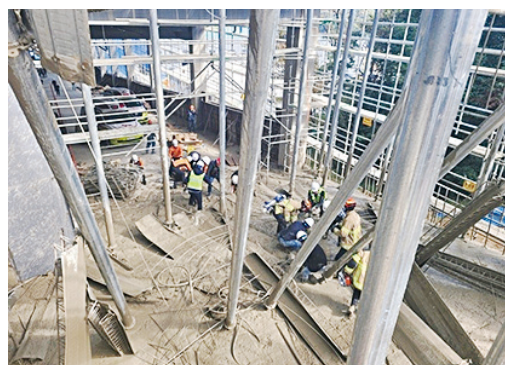
지난해 10월 근로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사망한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인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사고 전담수사팀은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청업체인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 감리업체의 상주감리 등 총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21일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근로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부상자들은 사고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추락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찰은 거푸집을 받쳐주는 동바리를 임의로 2단으로 연결하고 작업해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무게 중심이 쏠리지 않도록 가장자리부터 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해야 하나 한쪽에 들이붓는 식으로 타설해 하중이 몰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총 5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약 3개월간 수사를 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피의자들의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대북 송금 의혹’ 안부수 회장… 주 2회 집중심리 재판 진행

구속기간 남기지 않고 재판 종료 방침

북한에 거액의 달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사진)의 재판이 집중심리로 진행될 방침이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안 회장의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이 사건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5월 28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남지 않는 선에서 재판을 마치겠다”며 “법정 사정이 허락하는 한 집중심리로 거의 매주 이틀씩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인 피고인 인정신문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만 진행됐다.

안 회장이 구속기소된 지 2달이 지났으나 변호인이 이달 중순 뒤늦게 선임되면서 검찰 자료를 열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과 공모해 중국과

북한에서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21만 달러 및 180만 위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회장이 아태협과 쌍방울 그룹이 추진하는 대북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향후에도 대북사업을 우선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거액을 북측 인사에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안 회장이 대북 송금으로 쓴 돈 대부분은 쌍방울그룹이 아태협에 기부한 후원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23일 오후 2시 10분 진행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친밀감 표시였다”… 부하 여직원 성추행 혐의 부인한 경찰 간부

“사실 인정하지만 추행 의도없어” 부인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간부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경감 측은 “친밀감 표현이었다”며 “성추행 의도

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 경감은 지난해 8월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강제 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당일 B씨의 주거지로 찾아가 여러 차례 전화하고 현관 인터폰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B씨가 사건 이후 우울병 진단을 받은 점, A 경감의 추행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8일 그를 구속했다.

A 경감의 변호인은 이날 “성추행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친밀감을 표시하려 했던 것으로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며 “대법 판례 상 수신인이 받지 않은 통화에 대해선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달 10일이다. 박진석 기자

해물 가득 통통우동볶이

전자레인지 6분OK

대원찬 MAKE A FOOD CULTURE

주식회사 신도리코

대표전화 (031) 247-1372~3

H.P 010-7383-1372

영업안내

- 컬러 디지털 복사기[임대·판매·A/S]
- 3D 프린트 판매
- 전산소모품

신도리코

• 디지털 복사기 임대·판매

• 유지보수

• 서비스 전문업체